

[종합·해설]

10·25 재·보선 본격 '표심 잡기'

해남·진도 국회의원 등 9자리

정계개편 방향타...여·야 총력전

북한 핵실험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석 중인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9자리를 새로 뽑는 10·25 재·보선이 12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공식선거운동은 재·보선이 치러지는 ▲해남·진도와 인천 남동(국회의원) ▲화순군과 신안군, 충북 충주시, 경남 창녕군(기초단체장) ▲서울 금천구(광주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와 경남 밀양시(기초의원) 등 모두 9곳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북 핵실험 파문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데다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과 겹쳐 있어 여야의 총력전 양상은 피지 못할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로 나타난 표심이 향후 정계 개편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정당은 해남·진도와 인천 남동을 등 2곳의 국회 의원 보궐선거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5일장 등 돌며 거리유세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박양수, 민주당 제일병, 한나라당 설철호 후보는 법정 선거운동 개시 첫 날부터 해남·진도를 넘나들며 거리유세전을 펼쳤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해남 북평 남창 5일장을 시작으로 진도읍 5일장터, 해남타미널 로터리 등지에서 후보 연설회를 갖고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가져올 후보는 여당 후보뿐”이라며 해남·진도를 거점으로 한 해양관광허브 건설 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채 후보는 “민주당의 재도약과 전국 정당화로 차기 대선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해남·진도발전 5



10·25 재보선 법정 선거운동 개시 첫 날인 12일 한나라당 임근욱 후보와 민주당 정원기 후보, 무소속 전원준 후보(왼쪽부터) 등 화순군수 후보 3명이 화순읍내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화순=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개년계획’ 수립 등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설 후보는 진도읍 5일장터 등 진도 일대를 누비며 J프로젝트 적극 지원, 설 관광자원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원기, 한나라당 임근욱, 무소속 전원준 후보 등 화순군수 보궐선거 출마자들도 이날 첫 거리유세에 돌입했다.

무소속 전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4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CEO 경험을 살려 낙후된 화순을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고 대결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상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 후보는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화합하는 화순, 잘 사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열린행정과 선진농업 폐카육성, 너릿재를 관통하는 산업도

로를 비롯한 교통망 확충,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최영수, 한나라당 김영식 후보를 비롯 무소속으로 강성만·박우량·이춘식·최신웅씨 등 6명이 출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신안군수 재선거 후보자들도 섬지역을 오가며 유세 경쟁을 펼쳤다.

정책선거 실천 협약도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선 후보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해남·신안·화순=박정옥·조원남·조성수기자

■ 박광태 시장-광주지역 국회의원 ‘화해의 악수’ 까지

100일 회견서 “사과”...“고소 취하” 화답

‘감정대립’ 비난 여론 확산 서로가 부담...4개월간 반복 마무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박광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기로 결정, 법정 소송까지 번졌다 양측의 감정 대립이 4개월 만에 해소됐다.

12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박광태 시장의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불화가 야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박광태 시장이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야기된 물의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믿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박광태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의

원들은 이번주 내에 박광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기로 결정, 법정 소송까지 번졌다 양측의 감정 대립이 4개월 만에 해소됐다.

이에 따라 법정소송까지 번졌던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의원들의 감정 대립은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사과가 법원 판결이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배경에는 우선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감정 대립에 대해,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박광태 광주시장이 자존심을 잡고 지난 당정협의에 이어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사과 입장을 나타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양형일, 염동연, 김태홍 의원 등도

술이 엉갈려 사법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기자들은 선관위 조사에서 돈을 둘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남선관위는 후보자 친척이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신고가 중앙선관위에 실명으로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해남·진도 보선 촌지 돌린 후보자 친척 고발

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한 후보자의 친척이 기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해남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모 후보 친척인 A(여·42)씨를 공직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

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석한 6명의 기자에게 20만원씩의 사례금을 준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돈을 준 사실을 시인했으나 기자들의 경우 진

로 10년 째온자다

POSSIBLE
POSITIVE
PASSION

